

미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경우

| 요약 |

-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현재의 통상정책 기조 유지 전망
 -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지속으로 통상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임.
 - 무역구제조치 남발과 통상 관련 법안의 확대해석에 따른 수입규제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
 - 중국, 일본 등과의 통상협상의 계속 진행
 - ‘공정한 무역 체제’를 주장하면서 WTO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WTO와의 대립 격화
- 대중 견제의 강화와 공급사슬의 국내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
 - 향후 중국과의 무역 관련 이슈는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임.
 - ICT분야에서의 보안 관련 문제,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, 데이터 흐름 규제, 의료 및 의약품 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
 - 그중에서 ICT분야,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, 의료 및 의약품 관련 이슈에서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.
 - 공급사슬의 완전한 국내화가 곤란할 경우 중국을 배제한 공급사슬을 구축하려 할 것으로 보임.
- 트럼프 재선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
 - 무역·통상을 담당하는 인적구성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철강 및 자동차 산업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대응책 마련이 필요
 - 미-중, 미-일 무역협상의 전개양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. 또한 미-대만 관계의 추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
 - 미-WTO와의 관계에 주목
 - 미국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해서 WTO의 분쟁해결 기능에 의존하기보다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함.
 - 대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는 ICT분야와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미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음.
 - 공급사슬 국내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미국에의 투자확대와 더불어 우리도 공급사슬의 다변화를 고려해야 함.

※ 본고는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(Information Technology & Innovation Foundation, ITIF)과 산업 연구원이 10월 19~20일 양일간 공동으로 진행한 화상 세미나의 논의를 토대로 작성.

1.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의 통상환경 변화

■ 현재의 통상환경이 지속

-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1기 때와 비교해서 통상환경에 특기할 만한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.
 - 지난 4년간의 행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음.
 - 취임 초기에 예측 불가능성으로 받아들여졌던 부분도 합리적 기대의 형태로 각 경제주체의 대응에 반영
- 그러나 익숙함이 상황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음.
 - 통상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각국 및 경제주체의 대응에 반영되어 반응하는 것으로 결국은 전체적인 무역규모의 위축으로 연결
 - 자기중심적 고립주의와 그에 기반을 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지속이 예상되어 2기 임기 동안 통상환경이 현 상태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전망

■ 트럼프 집권 2기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정책

- 고립주의적 보호무역주의의 지속 및 강화
 - 선거공약을 통해서 지난 4년간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며 대중국 견제를 강화해 나갈 것을 밝힘.
 - 1기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즉흥적 정책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
 - 1기 임기 때 등용했던 무역·통상분야의 인적 구성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임.
 - 따라서 철강, 자동차 등 트럼프 임기 동안 어려움을 겪은 산업분야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.
 - EU와는 항공기 및 디지털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대립 지속
- 슈퍼 301조,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해석 적용 및 무역구제조치 남발 등 미시적 수단에서의 의존도 강화
 - 이미 TPP 탈퇴, 한-미 FTA 재협상, NAFTA 재협상 등 굵직한 거시적 수단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미시적 수단에서의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보임.

- 무역구제조치 외에 환율조작국에 대한 조사 카드를 재활용할 가능성도 있음.
- 통상협상의 계속 진행
 -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간 통상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으며 무역상대국과의 일대일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
 -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부문 최우선 순위로 무역 협상의 이행을 들었음.
 - 그중에서도 영국, 케냐, 중국이 협상의 최우선 상대이며 일본과의 통상협상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음. 다만 여전히 일방주의적인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보여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
 - 이 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미-중, 미-일 통상협상의 진행과 결과
- WTO와의 대립 격화
 - 트럼프 행정부의 다자간 통상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WTO와의 대립의 형태로도 나타남.
 -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WTO의 규정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WTO를 무력화하려 함으로써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음.
 - 일단은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WTO 개혁을 주장하고 그것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WTO 탈퇴 위협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임.
 - 다만 현지 전문가의 견해로는 2기 임기 동안 실제 WTO 탈퇴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WTO 개혁 추진에 진력할 것으로 전망
 - 특히 중국에 제공되는 특혜 철폐와 불공정한 최혜국 대우의 시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, 이 부분에서 한국이 보조를 맞춰주기를 기대하고 있음.

2. 대중 관계 및 공급사슬 국내화가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

▣ 대중 견제의 강화

- 대중 견제 강화의 배경
 -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세계질서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편의를 봐주는 전략을 취한 클린턴·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중국의 대두를 허용하고 기업들의 사업장 해외유출을 조

장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와 미국 국내의 실업률을 증가시킨 중대한 실책으로 간주

- 클린턴·오바마 행정부의 실책을 시정한다는 명분하에 중국에 대한 자신의 공세를 합리화
- 향후 중국과 발생하는 무역 관련 이슈는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임.
 - 안보의 관점에서 화웨이 등 중국의 ICT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중국 ICT 장비의 미국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음.
 - 동시에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수출 및 대미 투자 규제 강화와 규제대상 기업목록(entity list)의 확대를 지속
 -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개발이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.
-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대중 견제와 동시에 미-중 무역협상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
 - 지적재산권과 농업분야에서의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을 1차 임기 동안 대중 협상에서의 최대의 성과로 평가
 - 향후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특히 강조될 부분은 데이터 흐름 등 ICT분야에서의 보안 관련 문제,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, 공급사슬 문제 등이 있음.
 - 대중국 견제를 위하여 EU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궁리
 - 트럼프 2기 행정부는 ICT 분야,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, 의료 및 의약품 관련 이슈 등에서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.
- 투자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임.
 -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투명성, 규정 준수, 자율규제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사전에 투자의 내용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.
 - 미국의 대중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의 투자자금이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의 자금줄이 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
-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이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
 -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미국은 강한 미국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중국에 대해서 일대일 대결구도로 동맹국이나 주변을 신경쓰지 않고 독자적인 견제전략을 취해왔음.
 -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국의 협력은 환영하나 바이든과는 달리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.

-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이러한 기조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.
- 한국에 '공정한 무역 체제'에 중국이 따르도록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.
 - *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무역체제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로부터 졸업하는 것을 의미
-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만과의 FTA나 양자간 투자협정(bilateral investment treaty, BIT) 등의 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.
 - * 이 경우 ICT분야에서 한국의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.

■ 공급사슬의 국내화

- 공급사슬 국내화 주장의 배경
 - 이미 미국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주의와 기업들의 오프쇼어링 등이 자신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
 -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트럼프, 바이든 양 후보가 유권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쪽을 택함.
 - * 지난 대선에서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공격하는 전략이 효과적임을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인식
 -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대통령 취임 직후 기업들의 사업장 해외이전 계획을 변경시키고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를 촉구
- 공급사슬 국내화가 한국에 미칠 영향
 - 외국기업에도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미국에 사업장을 세우고 미국인을 고용하여 미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주장함.
 - 다만 취임 초기를 제외하면 공급사슬 국내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입안이나 해외사업장의 국내복귀와 관련된 뚜렷한 움직임은 없었음.
 - 따라서 2차 임기 때도 이와 관련하여 가시적이고 구체화된 정책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.
 -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첨단기술 및 의료 분야의 공급사슬의 국내화가 강조될 것으로 보임.

- 공급사슬의 국내화를 생산의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공급사슬의 완전한 국내화가 곤란할 경우 중국을 배제한 공급사슬을 구축하려 할 것으로 보임.
- * 따라서 공급사슬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며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파트너는 동남아시아가 될 것으로 예상

3.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우리의 대응 방향

▣ 1기 임기의 기초가 지속됨을 전제로 한 통상전략 수립이 필요

- 무역·통상을 담당하는 인적 구성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임.
 -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USTR 대표로 유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철강 및 자동차 산업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.
 - * 따라서 해당 산업은 지난 4년간의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
 - 1기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즉흥적 정책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감안한 통상 및 투자전략이 필요
 - 미-중, 미-일 무역협상의 전개양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미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 - 미-대만 관계의 추이에도 주의가 필요
- 미국과 WTO와의 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
 - 반덤핑 등의 무역구제조치와 통상법 301조, 무역확장법 232조 등의 확대해석 및 적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WTO의 분쟁해결 기능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음.
 - 따라서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WTO를 통하기보다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함.

▣ 대중국 견제 및 공급사슬 국내화 움직임에 대한 대비가 필요

- 대중국 견제 관련
 -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의 움직임 속에서 ICT분야와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- ICT분야의 주요 지적재산권은 미국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분야를 주력산업 중 하나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음.
- 미국은 중국 관련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통상과 관련하여 불공정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음.
- 공급사슬 국내화 관련
 - 미국의 공급사슬 국내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공급사슬의 탈중국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
 - 한국 기업들에는 공급사슬의 탈중국 추세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음.
 - 미국 시장에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미국에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공급사슬의 다변화를 고려해야 함.
 - 이를 활용하려면 중국 일변도의 가치사슬 구축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지역 및 미국에의 투자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〈표 1〉 트럼프 통상정책과 리스크 및 대응방안

바이든과의 공통점	대중 견제의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국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독자적 견제노선 추진 • ICT분야에서의 규제 강화: 대중 수출·투자 규제 및 규제대상 기업목록 확대 • WTO에서 중국이 받는 특혜 철폐 추진
	공급사슬의 국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급사슬에서의 중국 배제가 목적 • 기본적으로는 공급사슬 국내화가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동남아 등을 파트너로서 주목
바이든과의 차이점	보호무역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역·통상분야에서 강경 보호무역론자들의 득세 계속 • 보호무역정책의 지속
	WTO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WTO 개혁을 명분으로 대립 격화 및 분쟁조정 기능 무력화 • 모든 회원국에 대한 '동등한 대우' 주장
	무역협상 및 다자간 협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자간 협상에는 부정적, 일대일 협상 선호 • 중국, 일본 등과의 협상은 계속 추진 예상
리스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호무역기조의 지속과 불확실성 • WTO의 분쟁해결 기능의 무력화
대응방안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호무역조치에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한 대응책 마련 • 무역구제조치에 대해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• 중국의 불공정무역 시정에 협조 • 미국 내 투자확대 및 공급사슬 다변화

